

보도시점 2025. 5. 20.(화) 16:00 배포 2025. 5. 20.(화) 13:00

정부·민간 합동 녹색국채 발행 방향 모색,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 검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5.5.20.(화), 14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舊 ESG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자 :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주재),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이번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하여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 '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정부와 민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6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 (예) 공공열분해 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또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의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나라 녹색국채 발행 방향과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및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 및 국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지속가능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전보람 (044-215-5930)
		담당자	사무관 김재현 (z56543@korea.kr)
			사무관 이재모 (zamo@korea.kr)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	책임자	과 장 최원석 (044-215-4940)
		담당자	사무관 임원호 (wonholim@korea.kr)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탄소중립전략팀	책임자	팀 장 진승우 (044-215-4970)
		담당자	사무관 이현주 (hj1e3@korea.kr)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범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부터 기존 'ESG 정책협의회'를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 이외에도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하여

민간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분야의

핵심정책 3건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안건1) 먼저 '26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기금은 ①온실가스 감축, ②저탄소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가 높고, 감축효과가 우수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인프라 및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민간투자를 뒷받침 해나가는 한편,
핵심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건2) 다음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을 수립하였고,
그 틀 안에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유무상 배분비율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기간(2026~2030)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의 핵심 기간으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큼니다.

정부는 2030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총량과 할당방식 등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저탄소 설비 지원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건3) 마지막으로,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과 시사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로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24년 말 기준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 잔액은 약 3조 달러(BIS)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국채시장의 선진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녹색국채는 녹색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큼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